

외국인 직접투자와 법치주의와의 관계*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Rule of Law

양 준 석(Junsok Yang)**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whether FDI inflows affect rule of law, using World Justice Project's Rule of Law Index. Many pro-globalization advocates claim that increased trade and FDI brings better rule of law institutions (which, following WJP Rule of Law Index, is defined as limited government powers, absence of corruption, order and security, fundamental rights, open government (transparency), effective regulatory enforcement, effective civil justice and effective criminal justice); and in turn, better institutions bring more trade and FDI causing a positive feedback effect. However, many anti-globalization advocates claim that FDI weakens rule of law because, in order to attract FDI, domestic governments may place the interests of foreign investors and multinational corporations over the interests of its citizens.

This paper runs OLS regressions using FDI inflows (as a percentage of GDP), per-capita GDP and the rule of law indices in eight areas of rule of law. The results show that while FDI have positive influence on absence of corruption and order and security; FDI has no effect on other areas of rule of law, including fundamental rights, government transparency, effective regulatory enforcement, and effective civil and criminal justice systems. Thus, economic globalization and rule of law seems to be completely separate issues, and have virtually no effect on each other.

However, per-capita GDP does have a strong effect on the rule of law, so if FDI and trade helps raise per-capita GDP, economic globalization may have an indirect effect on the rule of law.

Keywords: Foreign direct investment, rule of law, economic development

I. 서론

국제무역과 투자가 기본 인권, 정부의 권력, 법과 규제의 투명성과 규제의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는 제국주의 시대부터 수백년간 계속되고 있으나 1990년대 이후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다시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일부 경제 학자들이나 정치학자들은 1960년대 이후 한국 등 일부 아시아 국가들이 무역을 통하여 빠른 속도로 경제를 발전시키면서,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기본 인권을 강화시키고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며 법과 규제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시킨 점을 보며 국제무역과 국제투자가 기본 인권, 정부의 권력 제한, 투명성과 효율성의 제고 등 기본 법치주의

* 본 연구는 2012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연락처 yanjuna@catholic.ac.kr

제도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믿게 되었다. 또한, 강화된 법치주의 및 정치경제 제도는 무역과 국제투자를 다시 강화시켜주어 법치주의와 기본 정치경제제도는 세계화와 긍정적 피드백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고 일부 관찰자들은 주장하게 되었다. 1990년대에 선진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이 「와싱턴 콘센서스」를 개도국들에게 강력하게 권장한 이유 중 하나는 이러한 피드백 효과를 유도하고자 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외국인이나 국제기구가 국내법과 규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자 일부 반세계화 주장자는 무역이나 국제무역과 투자 등의 경제적 세계화가 국내 법치주의와 제도를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내제도를 약화시킨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특히 세계화 비판자들은 이윤을 추진하는 다국적기업과 자국기업의 이득을 추진하는 선진국이 WTO나 IMF 같은 국제기구를 통하여 개도국의 자치권을 제한하고, 자국 국민의 권리나 이익의 보호보다는 외국 기업들의 이득을 보호한다고 주장하였다. 경제 차원에서 세계화는 무역자유화와 투자자유화,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자유화로 간주되는데 본 글은 외국인 직접투자(FDI)¹⁾를 통한 세계화가 법치주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²⁾. 특히 회귀분석을 통하여 FDI가 현재와 미래의 법치주의를 향상시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II장에서는 본 글에서 사용할 법치주의의 범위와 정의를 설명한다. 본 글에서는 법치주의 제고를 위해 설립된 단체인 World Justice Project(WJP)가 발표하는 법치주의 지수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제II장에서는 FDI와 법치주의의 각종 요소(정부권한의 제한, 부정부패의 부재, 질서와 안전, 기본적 인권, 정부의 투명성, 효율성 규제집행, 민사사법제도와 형사사법제도 등)의 관계를 검토한 기존 연구 중 일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III장에서는 본 글의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고 제IV장은 결과의 정책적 의미를 살펴본다. 제V장은 간략한 결론이다.

II. 외국인 직접투자가 법치주의에 주는 영향에 대한 기존연구

외국인 직접투자가 법치주의에 주는 영향에 대하여 언급하기 전, 법치주의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본 글에서는 World Justice Project (WJP)의 법치주의의 정의를 사용하고자 한다. WJP는 독립적 국제 비영리 단체로 범세계적 법치주의의 제고를 통하여 기회와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2006년에 설립되었다³⁾. WJP는 주요활동 중 하나로 2009년부터 매년 법치주의 지수를 계산하고 발표하고 있다. WJP의 법치주의 지수는 총 8개 분야의 지수를 포함하고 있는데, <표 1>에서는 이 8개 분야를 표시하고 있다⁴⁾.

1) FDI는 외국인들이 국내기업 경영권을 가지거나 영향을 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투자를 의미하며, 세계은행은 외국인들이 의결권주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2) 법치주의와 무역자유화에 관련된 내용은 Yang(2013)에서 다룬다.

3) WJP에 대한 내용은 WJP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http://worldjusticeproject.org>

법치주의와 관련된 기존 연구의 대다수에서 법치주의에 대한 객관적 지표가 필요할 때에는 Political Risk Services(PRS)社の 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에서 제시하는 법치주의 지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PRS사의 법치주의 정의는 「국민이 법과 집행과 분쟁중재에 있어서 기존 제도를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는가」로서 법과 질서 등 2개 분야에 대한 지수만 발표하므로 <표 1>과 비교할 때 WJP는 법치주의와 관련된 더욱 다양한 범위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볼 수 있다. WJP 법치주의 지수에서 F1(정부권한의 제한), F4(기본적 인권)은 민주주의와 기본인권에 대한 내용이며, F5(정부의 개방도)와 F6(효과적인 규제집행)은 규제투명성이나 생산성이나 경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개혁과 관련된 내용이다. 따라서 WJP의 법치주의 지수를 활용하면 기존 법치주의보다는 더욱 광범위한 사회정의와 경제효율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본 글은 WJP에 따라 이 8가지 분야를 모두 동시에 의미하는 경우, 이를 법치주의(rule of law)라고 총칭하기로 한다.

WJP는 두 가지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법치주의 지수를 계산한다. 첫 설문조사는 매년 조사대상 국가의 법과 규제관련 전문가에게 배포되는 전문가 설문조사이며, 두 번째 설문조사는 3년에 한번씩 조사 대상국가의 가장 큰 3개 도시의 일반 시민들에게 배포되는 일반인 설문조사이다. 이 설문조사들에서는 응답자의 단순한 의견만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난 1년동안 응답자 또는 응답자의 가족이 범죄를 경험했는지, 부당한 부정행위를 경험했는지 등 하드 데이터에 가까운 질문도 물어보고 있다. 이 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법치주의 지수가 계산되며, WJP 웹사이트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500명의 전문가와 97000명의 일반인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2012년 하반기에 발표한 법치주의 지수는 97개국을 포함하고 있으며, 2011-2012년간 실시한 전문가 설문조사, 2008-2012년 조사한 일반인 설문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비해서 PRS사의 지수는 전문가들의 설문지수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물어보는 질문의 숫자나 범위는 WJP보다 적다. WJP의 지수는 각각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있으며 값이 높을수록 법치주의 수준도 높다. WJP(2012)에 포함된 97개국은 <부록>에 나열하였다.

4) WJP의 법치주의 지수에 대한 더욱 자세한 영문내용은 WJP(2013)을 참고할 수 있고, 본 글보다 자세한 국문 정리는 양준석(2012)을 참고할 수 있다. WJP 보고서에서는 <표 1>의 8개 분야 외에도 비공식적 정의(informal justice)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있지만, 아직 지수화를 시키지는 않고 있다.

<표 1> WJP 법치주의 8개분야와 2012년 한국 점수와 등수

	기호	내 용	한국 점수	한국 등수
정부의 책임성	F1	정부권한의 제한 - 기본법이 정부의 권한을 정의한다. - 입법부와 사법부, 비정부 기관이 정부의 권한을 효과적으로 제한한다. - 독립적인 감사와 검도를 통하여 정부의 권력을 효과적으로 제한한다. - 관리들의 부정행위를 징벌한다 - 법에 따라 정권이 교체된다	0.66	28
	F2	부정부패 부재(不在) - 행정부나 사법부의 공무원, 경찰과 군인, 입법부 의원들은 자신의 권한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0.74	25
	F3	질서와 안전 - 범죄가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있다. - 사회적 갈등(분쟁)이 효과적으로 제한된다. - 개인적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0.82	25
보안 과 기본권	F4	기본적 인권 - 동등한 처우, 차별의 금지, 생명권과 개인의 안전, 적법절차와 피고인의 권리가 효과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 자기 의견이나 표현의 권리, 신앙과 종교의 자유, 사생활의 보호가 효과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 집회와 교제의 자유 및 기본적 노동권리가 효과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0.76	20
	F5	정부의 개방도 - 민간인이 법을 이해할 수 있다. - 법은 널리 홍보되며 접근할 수 있으며, 안정적이다. - 청원이나 참여의 권리가 효과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 민간인들이 공적 법안을 입수할 수 있고 공적 정보를 접근할 수 있다.	0.74	15
정부 개방 과 규제 집행	F6	효과적인 규제집행 - 정부의 규제가 효과적으로 부적절한 영향을 받지 않게 적용되며 집행되고 있다. - 행정적 절차는 부적절한 지연이 없이 진행되며 적법절차를 존중한다 - 정부는 재산을 수용할 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다.	0.67	21
	F7	시민 정의(민사)의 접근 - 국민은 가능한 구제책을 알고 있으며 법적 자문과 법적 대리(변호사 등) 및 법정을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받을 수 있다. - 시민 정의에 대한 차별이 없으며 부정부패가 없고 정부의 부적절한 영향력이나 부적절한 지연이 없다. - 시민정의를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 공정하고 효과적인 대체적 분쟁해결 (ADR) 절차를 접근할 수 있다.	0.72	14
정의 의 접근	F8	효과적인 형사사법 제도 - 범죄를 효과적으로 수사하며 신속하게 판결한다. - 교정제도는 범죄를 줄이는 데에 효과적이다. - 형사사법 제도는 공정하고 부정부패가 없으며 정부는 부적절한 영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 형사사법 제도는 피고자에게 적법절차를 적용한다.	0.76	10

<자료> WJP(2012) p.11, 양준석(2012) p.85 <표 1>.

일상적으로 법치주의는 FDI에 영향을 준다고 간주되어 왔다. 단, 법치주의가 높아야 FDI가 많이 들어오는지, 낮아야 FDI가 많이 들어오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어 왔으며 기존 연구의 대부분도 이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기구들은 법치주의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어야만 FDI를 많이 유치하고 국내경제를 개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국제기관들은 정부가 외국인투자를 적법절차없이 수용하지 못하도록 정부의 권한 제한 및 재산권 제도를 강조하고 있으며⁵⁾, 투자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법제도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효율적인 민사와 형사 사법제도의 유무를 강조하며, 각종 국내규제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집행되어야 FDI로 들어온 기업이 법과 규제를 준수하고 기업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투명성과 효율적인 규제체제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하에 「와싱턴 콘센서스(Washington Consensus)」가 작성되어 국제기관들은 개도국들에게 이를 권장하였고⁶⁾, OECD는 FDI Restrictiveness Index를 계산하고 있다⁷⁾. 컨설팅 회사인 AT Kearney社は FDI를 하고 있는 CEO들과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FDI 신뢰도 지수(FDI Confidence Index)를 계산한다⁸⁾. FDI 신뢰도 지수는 FDI에 대한 구체적 질문보다 각 조사대상자의 견해나 소신을 묻고, 이를 바탕으로 지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신뢰도 지수로부터 FDI를 좌우하는 구체적인 요소를 찾기는 어렵지만, 정부와 국민의 태도, 규제체제, 차별대우의 유무 등이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로 이 기관들은 FDI유입 및 경제세계화는 경제개발 및 법치주의의 강화와 상호보완적인 긍정적 피드백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법치주의와 FDI간의 관계를 증명하였다기보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FDI가 민주주의 및 기본적 인권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남아있다. 이론적으로 FDI는 민주주의와 기본적 인권 중 일부와는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일부와는 부정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자면 Li and Resick (2003)에 의하면 재산권의 보호와 FDI는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지만, 정치적 다양성은 다국적 기업들의 영향력을 약화시켜 FDI를 약화시킬 수가 있다⁹⁾. 일부 학자들은 긍정적인 측면이 부정적인 측면보다 강할 뿐만이 아니라 FDI로 인하여 1인당 GDP가 높아지면 기본적 인권도 강화된다고 본다¹⁰⁾. 또한 다국적기업은 기업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5) North and Weingast (1989) 참조

6) Williamson(2004)에 따르면 Washington Consensus는 재정의 건전성, 공공지출의 우선순위 조정, 세제개혁, 이자율 자유화(금융자유화), 환율 합리화, 무역자유화, FDI (국내유입) 자유화, 민영화, 규제철폐, 재산권 보호 등을 포함한다.

7) OECD(2010)에 따르면 FDI Restrictiveness Index는 외국인 주식투자 제한, 심사와 사전조건, 주요임원에 대한 조건, 외국기업에 대한 기타 국내영업 조건 등에 따라 지수를 계산한다. 여기에는 법치주의의 8개 요소가 구체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지만, 정부권한의 제한, 민사 및 형사 제도, 효과적 규제집행에 관련된 내용들이 암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8) Laudicina, Paul A., Erik R. Peterson, Johan Gott (2011) 참조.

9) Li and Resnick (2003) pp.176-177

10) 주로 미국과 영국의 정치인들이 흔히 주장하며, Mann (2003) pp.1-7에서 정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는 한국과 대만의 역사를 사례로 흔히 사용한다.

민주적 국가에 투자를 하며¹¹⁾, 이러한 선진국 기업의 영향으로 민주적 국가의 기본적인 인권과 민주주의가 강해져서 FDI와 기본적인 인권 및 민주주의는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서로 발전을 가속화시켜주는 긍정적 피드백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일부 학자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직 생산비용이 가장 저렴한 국가를 찾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권이 취약하고 법치주의가 약한 국가들에 투자를 한다고 하여 FDI와 기본적인 인권 및 민주주의는 부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¹²⁾ 최고급 운동화를 만드는 나이키 회사가 저렴한 임금을 찾아 아동노동을 착취하는 파키스탄으로부터 운동화를 수입한다든지, 다국적기업들이 FTA나 BIT를 통하여 국내 규제를 약화시켜 국민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사례로 들고 있다.

실제로 FDI와 법치주의의 관계를 조사한 기존 연구를 보면 법치주의 등 제도적인 요소가 FDI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의 비교적 단기적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 Jensen(2003)은 1990년대 FDI의 GDP 비중을 종속변수로, 그리고 1980년대의 민주주의 및 과거 FDI 등의 제도적 요소를 독립변수로 다루어 민주주의 국가에 FDI가 많이 유입되는지를 횡단데이터와 패널데이터 회귀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각종 경제변수와 정치변수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는데, 경제변수로는 시장크기, 개발수준(1인당 GDP의 로그수치), 무역, 자연자원, 정부소비지출, 인적자본수준과 정부재정적자를 사용하였고, 정치변수는 민주주의 지수와 민주주의 지수의 자승을 사용하고 조정변수로 정부평판, 정부압수, 부패도, PRS사의 법치주의지수와 관료의 질을 사용하였다. 이 글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에 FDI가 많이 유입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유사한 방법론으로 민주주의가 FDI의 영향을 주는지를 검토한 Busse(2003)도 역시 민주주의 국가에 FDI가 다소 많이 간다고 결론을 지었다.

반면, Asiedu and Lien (2011)은 linear dynamic panel data 모델을 사용하여 GMM 추정을 시도하였다. 이 분석에는 민주주의지수, 과거 FDI/GDP 비중, 무역/GDP 비중, 고정투자/GDP 비중, 자연자원, 인플레이션, 로그 GDP와 로그 GDP의 제곱 등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는데 FDI와 민주주의는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단 자연자원의 수출이 경제활동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에 한해서는 민주주의와 FDI가 부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결론을 짓고 있다.

본 글은 이러한 민주주의만을 다룬 기존 연구보다 더욱 넓은 범위의 법치주의에서 제도와 FDI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본 글은 법치주의 제도가 FDI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는 기존 연구와는 다소 반대로 FDI가 법치주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의 형태로 통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Mann(2008)은 선진국이 중국의 세계화(무역과 투자)를 장려하는 데에 있어서 이를 정당화하는 이유 중 하나로 중국의 세계화가 중국의 법치주의 설립 및 미래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논리를 사용

11) Rodrik (1996, Busse (2003)에서 인용).

12) Li and Resnick (2003), Amnesty International (2002, Busse (2003)에서 인용) 참조

하고 있지만, 이러한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세계화는 중국과 일반 중국인의 소득을 증가시켜주지만, 이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중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태도를 강화시켜 줌으로서 오히려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을 지연시킬 것이라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글은 FDI가 법치주의 및 각종 경제정치적 제도를 강화시키는가를 살펴보는 방향으로 통계를 분석하고자 한다¹³⁾.

III. 분석결과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본 글은 기존연구들보다 다소 다른 전략을 취한다. 즉 본 글은 기존 민주주의나 법치주의가 FDI에 영향을 주는가보다는 FDI가 미래 법치주의에 영향을 주는지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시장개방이 제도의 향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의 장기적이며 제도적인 문제를 평가해 본다는 것이다.

양준석(2012)에 따르면 법치주의 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경제변수는 1인당 GDP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 사용할 회귀분석은 기본적으로 FDI와 1인당 GDP를 독립변수로 사용하고 법치주의 지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하고 있다. 본 글의 준비과정에서 1인당 GDP뿐만 아니라 GDP 규모와 인구를 대신 독립변수로 사용해 보았지만, 1인당 GDP를 사용한 경우와 비교할 때 더욱 낮은 Adjusted R²와 F-statistic이 나타났고, 질적으로는 1인당 GDP를 사용한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으므로 본 글에서는 1인당 GDP를 사용한 결과만 보고한다. 본 글의 기본 OLS 회귀분석 공식은 아래와 같다.

$$Fi = c + \alpha I + \beta y + \epsilon$$

여기서 Fi는 법치주의 지수로 <표 1>의 WJP(2012) F1부터 F8을 하나씩 사용한다. c는 상수, I는 FDI(유입)의 GDP 비중이며, y는 1인당 GDP(천 달러 단위)이다. ε는 에러이다. FDI의 GDP 비중과 1인당 GDP 통계는 세계은행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다운받았으며 1인당 GDP 통계는 2005년 실질 PPP 달러 기준 통계를 사용하였다. 회귀분석에서는 I와 y에 있어서 연별 데이터를 사용하기보다는 1992-2001년, 2002-2011년 10년간 데이터의 평균 수치를 사용하였다. 10년간 평균을 사용한 이유는 경기변동의 영향 및 2008년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을 부분적이라도 배제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하기 위해서다. 또한, 본 글에서 보고자하는 이슈는 FDI의 유입이 국내 법치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이기 때문에 단순한 FDI 금액보다는 FDI의 GDP 비중이

13) 엄격하게 말한다면 같은 시기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회귀분석은 인과관계를 표시하지 않고 오직 상관관계만 표시하므로 법치주의 변수를 독립변수로 배치하던지 종속변수로 배치하던지 큰 차이가 없지만, 결과 해석상 그리고 절차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더욱 적합한 통계라고 판단하였다.

<표 2>에서는 2012년의 법치주의 지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하고 1992-2001년 국내로 유입된 FDI의 GDP 비중의 평균(FDIIn9201)과 2002-2011년 1인당 GDP의 평균(GDPC0211)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돌린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보다시피 1인당 GDP는 계속 99%의 신뢰도를 보이고 있으며, 1인당 GDP가 \$1000 증가하면 법치주의 지수는 분야에 따라 0.07~0.15 증가한다고 나타난다. 1인당 GDP에 가장 민감한 지수는 F2(부정부패의 부재)이며, 가장 변화가 낮은 지수는 F3(질서와 안전)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과거 FDI의 유입은 대다수 법치주의 지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직 F2와 F3에서 90% 신뢰성 차원에서 효과가 있다고 나타난다.

<표 2> FDI 유입(1992-2001)이 법치주의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F1	F2	F3	F4	F5	F6	F7	F8
c	0.478*** (0.018)	0.390*** (0.019)	0.636*** (0.016)	0.539*** (0.018)	0.417*** (0.015)	0.452*** (0.014)	0.492*** (0.013)	0.432*** (0.016)
FDIIn9201	0.000 (0.005)	0.008* (0.005)	0.008* (0.004)	0.002 (0.004)	0.004 (0.004)	-0.000 (0.004)	-0.001 (0.003)	0.006 (0.004)
GDPC0211	0.012*** (0.001)	0.015*** (0.001)	0.007*** (0.001)	0.009*** (0.001)	0.012*** (0.001)	0.012*** (0.001)	0.009*** (0.001)	0.011*** (0.001)
Adj R ²	0.539	0.670	0.402	0.441	0.662	0.670	0.574	0.580
F-statistic	55.31	95.24	32.28	37.67	91.95	95.46	63.71	65.19
Obs	94	94	94	94	94	94	94	94

<범주> *: 90% 신뢰도, **: 95% 신뢰도, ***: 99% 신뢰도. 모든 공식의 F-통계는 99%의 신뢰성을 보이고 있다.

<포함국가> <부록>에 나열된 국가들 중 유입 FDI 자료가 없는 벨기에와 레바논, 1인당 GDP 자료가 없는 짐바브웨 제외

국제투자는 무역보다 더욱 빨리 국내의 경제환경에 적응하는 경향이 있다. <표 2>에서는 1992-2001년 FDI가 2012년 법치주의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기간의 차이는 너무 클 수도 있다. 즉, FDI가 법치주의에 영향을 줄 때 필요한 기간이 <표 2>에서 암시하는 10-20년보다 짧을 수 있다. 따라서 <표 3>에는 1992-2001년 평균 FDI 통계를 2002-2011년 평균 FDI 통계(FDIIn0211)로 대체하였다.

<표 3> FDI 유입(2002-2021)이 법치주의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F1	F2	F3	F4	F5	F6	F7	F8
c	0.472*** (0.018)	0.393*** (0.019)	0.633*** (0.016)	0.537*** (0.018)	0.425*** (0.015)	0.457*** (0.014)	0.489*** (0.013)	0.435*** (0.016)
FDIln0211	0.001 (0.002)	0.003 (0.003)	0.004** (0.002)	0.002 (0.002)	0.000 (0.002)	-0.002 (0.002)	-0.000 (0.002)	0.002 (0.002)
GDPC0211	0.012*** (0.001)	0.016*** (0.001)	0.008*** (0.001)	0.009*** (0.001)	0.012*** (0.001)	0.012*** (0.001)	0.009*** (0.001)	0.011*** (0.001)
Adj R ²	0.548	0.669	0.411	0.450	0.659	0.671	0.576	0.582
F	58.54	97.17	34.15	39.94	92.84	98.01	65.57	67.23
Obs	96	96	96	96	96	96	96	96

<범주> *: 90% 신뢰도, **: 95% 신뢰도, ***: 99% 신뢰도. 모든 공식의 F-통계는 99%의 신뢰성을 보이고 있다.

<포함국가> <부록>에 나열된 국가들 중 1인당 GDP자료가 없는 짐바브웨 제외

<표 3>에 따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는 법치주의 지수는 F3뿐이다. 따라서 <표 2>와 <표 3>의 결과에서는 FDI의 유입이 부정부패의 제거나 질서와 안전의 유지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기본적 인권, 정부권한의 제한, 규제투명성이나 효율성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나타나고 있다.

대다수의 연구나 논의에서는 법치주의, 인권 등의, 기본 정치경제제도와 국내로 들어오는 FDI의 관계를 논의하거나 분석한다. 들어오는 FDI는 국내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지만, 해외로 나가는 FDI는 국내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본 글에서는 혹시 해외투자 (국외로 나가는 FDI)가 국내 법치주의에 영향을 주는지를 보기 위해서 2002-2011년 해외투자의 GDP비중의 평균(FDIOut0211)를 독립변수로 활용해보고, 같은 기간의 총 FDI(국내유입과 해외투자의 합)의 GDP 비중의 평균(FDI0211)도 독립변수로 활용해 보았다. 그 결과는 <표 4>와 <표 5>에 정리하였지만, FDI변수들은 모든 8개 분야의 법치주의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나타났다¹⁴⁾.

14) 1992-2001년 해외 FDI와 유입 및 해외 FDI의 합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시도했지만, <표 4>과 <표 5>의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다.

<표 4> 해외 FDI 유출(2002-2011)이 법치주의에 미치는 영향

	F1	F2	F3	F4	F5	F6	F7	F8
c	0.496*** (0.015)	0.413*** (0.017)	0.655*** (0.014)	0.558*** (0.014)	0.432*** (0.012)	0.458*** (0.012)	0.494*** (0.011)	0.448*** (0.015)
FDIOut0211	-0.001 (0.004)	0.006 (0.005)	0.005 (0.004)	-0.002 (0.004)	0.001 (0.003)	0.000 (0.003)	-0.001 (0.003)	0.004 (0.004)
GDP0211	0.012*** (0.001)	0.015*** (0.002)	0.007*** (0.001)	0.010*** (0.001)	0.012*** (0.001)	0.012*** (0.001)	0.009*** (0.001)	0.010*** (0.001)
Adj R ²	0.583	0.661	0.388	0.521	0.715	0.677	0.591	0.565
F	59.12	81.86	27.31	46.22	105.26	88.03	61.05	54.98
Obs	84	84	84	84	84	84	84	84

<범주> *: 90% 신뢰도, **: 95% 신뢰도, ***: 99% 신뢰도. 모든 공식의 F-통계는 99%의 신뢰성을 보이고 있다.

<포함국가> <부록>에 나열된 국가들 중 해외FDI 통계가 없는 일부 국가들(부록 참고)과 1인당 GDP 통계가 없는 짐바브웨 제외

<표 5> 총FDI (국내유입과 해외투자, 2002-2011)이 법치주의에 미치는 영향

	F1	F2	F3	F4	F5	F6	F7	F8
c	0.496*** (0.017)	0.399*** (0.020)	0.636*** (0.016)	0.557*** (0.016)	0.432*** (0.014)	0.454*** (0.014)	0.489*** (0.013)	0.436*** (0.017)
FDI0211	-0.000 (0.002)	0.004* (0.002)	0.004** (0.002)	-0.000 (0.002)	-0.000 (0.001)	0.001 (0.001)	0.001 (0.001)	0.003 (0.002)
GDP0211	0.011*** (0.001)	0.015*** (0.001)	0.007*** (0.001)	0.009*** (0.001)	0.013*** (0.001)	0.011*** (0.001)	0.008*** (0.001)	0.010*** (0.001)
Adj R ²	0.583	0.667	0.425	0.519	0.715	0.678	0.594	0.574
F	59.05	84.00	31.68	45.81	105.21	88.34	61.79	56.91
Obs	84	84	84	84	84	84	84	84

<범주> *: 90% 신뢰도, **: 95% 신뢰도, ***: 99% 신뢰도. 모든 공식의 F-통계는 99%의 신뢰성을 보이고 있다.

<포함국가> <부록>에 나열된 국가들 중 해외FDI 통계가 없는 일부 국가들(부록 참고)과 1인당 GDP 통계가 없는 짐바브웨 제외

마지막으로, 1인당 GDP는 법치주의 지수뿐만이 아니라 유입된 FDI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만약 영향을 준다면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으로 회귀분석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1인당 GDP와 유입된 FDI의 상관계수는 약 0.3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간주되지만, 그래도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유입FDI에서 1인당GDP가 기여하는 추세를 제거한(de-trended) 잔여 유입FDI(FDIInA0211)를 독립변수로 활용해 보았다. 역시 2002-2012년의 GDP 비중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는 <표 6>에 정리하였는데,

여기서는 유입 FDI가 오직 F3(질서와 안전)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법치주의의 여타 7개 분야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나타나고 있다.

<표 6> FDI 유입(2002-2021)이 법치주의에 미치는 영향: 1인당 GDP가 FDI에 주는 영향 제거

	F1	F2	F3	F4	F5	F6	F7	F8
c	0.491*** (0.015)	0.421*** (0.016)	0.658*** (0.013)	0.556*** (0.014)	0.438*** (0.013)	0.459*** (0.012)	0.496*** (0.011)	0.451*** (0.013)
FDIlnA0211	0.002 (0.002)	0.004 (0.003)	0.005** (0.002)	0.002 (0.002)	0.001 (0.002)	-0.001 (0.002)	0.000 (0.002)	0.003 (0.002)
GDPC0211	0.013*** (0.001)	0.018*** (0.001)	0.009*** (0.001)	0.010*** (0.001)	0.013*** (0.001)	0.013*** (0.001)	0.010*** (0.001)	0.012*** (0.001)
Adj R ²	0.506	0.626	0.389	0.399	0.595	0.623	0.525	0.540
F	49.56	80.40	32.56	32.56	70.83	79.38	53.59	56.81
Obs	96	96	96	96	96	96	96	96

<범주> *: 90% 신뢰도, **: 95% 신뢰도, ***: 99% 신뢰도. 모든 공식의 F-통계는 99%의 신뢰성을 보이고 있다.

<포함국가> <부록>에 나열된 국가들 중 1인당 GDP자료가 없는 짐바브웨 제외

참고로 기존 연구들과 유사하게 유입된 FDI를 종속변수로, 법치주의 지수를 1개씩 독립변수로 사용한 분석도 시도해 보았다. 즉, 아래의 공식에 따라 OLS 회귀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I = c + \alpha F1 + \beta y + \epsilon$$

이 회귀분석의 결과를 보면 adjusted R2는 0.1 이하로 떨어졌고, 대부분의 경우 역시 법치주의 지수는 유입 FDI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위의 분석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고하지 않는다.

IV. 토론 및 정책적 함의

본 글에서는 FDI가 법치주의에 영향을 준다는 근거를 찾지 못하였다. 부정부패의 부재(F2)와 질서와 안전(F3)을 제외하고는 FDI의 유입과 법치주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다.

본 글의 결과는 기존 연구 Jensen(2003)이나 Asiedu and Lien(2011)과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두 연구는 민주주의가 FDI 유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검토한 글로, 두 글 다 민주주의가 FDI 유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글에서 민주주의

정의를 분석하면 WJP의 F1과 F4와 유사한 점이 있으므로 이 두 변수와 FDI는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이러한 관계는 보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각 연구가 사용하고 있는 지수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 Jenson(2003)에는 Polity IV에서 발표하는 지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의 개방도와 경쟁성, 그리고 정치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의 유무를 측정한다. Asiedu and Lien (2011)은 Polity IV의 지수와 Freedom House의 지수 및 ICRG의 민주화 지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Freedom House 지수는 야당의 존재 및 야당의 정치적 영향력을 보고 있으며 ICRG의 지수는 투표의 공정성과 정부 및 여당의 책임성을 본다. 반면 WJP도 역시 유사한 내용을 F1과 F4지수에서 보지만, 정치적인 측면, 즉 여당의 존재여부나 영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어떠한 제한이 있는지를 위주로 계산한다. 따라서 지수가 보는 현상이 서로 다소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다르다고 추정한다¹⁵⁾.

FDI가 기본적인 인권(F4)이나 정부권한의 제한(F1)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가설에 대해서 본 글에서는 그 근거를 찾지 못하였다. 따라서 일부 선진국 정치인이나 학자들이 주장하듯이 일반적 FDI를 통하여 인권이나 민주주의를 강화시켜 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를 찾지 못했으며 이러한 주장을 의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막연하게 FDI를 늘리는 것 보다는 조건부 FDI를 통하여 인권이나 민주주의를 강화시키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다자 협상을 원칙으로 하는 WTO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각종 양자 또는 지역별 FTA에서는 기본적 인권이나 노동권과 관련된 내용을 FTA에 포함시키는 현상¹⁶⁾을 볼 수 있는데, 본 글의 결과를 보아서는 FDI나 세계화를 통하여 인권이나 법치주의를 강화시키려면 이러한 조건의 유문화가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다.

반면, 부정부패의 부재(F2)와 질서와 안전(F3)이 FDI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일단 범죄가 억제되고 신체적 안전이 보장되어야 경제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사사법제도(F7) 및 형사사법제도(F8)와 FDI간 관계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비추어볼 때 외국인 투자자들은 투자대상국가의 사법제도를 별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본 글의 결과 중 정부의 규제투명성을 다루는 정부의 개방도(F5)와 효과적 규제집행(F6)이 FDI와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다소 의외적인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규제의 투명성과 내국인 및 외국인에 대한 비차별성은 FDI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15) Jenson(2003)은 본 글과 같이 OLS 회귀분석을 사용하였지만, Asiedu and Lien(2011)은 GMM 분석을 사용하였다. 또한, 이 두 글은 1인당 GDP 대신 과거 FDI, 인적자본, 정부재정적자 등 여러 독립변수를 추가하였으며 10년 평균보다는 연별 횡단(cross-section)데이터나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enson(2003)의 경우 adjusted R2가 본 글보다 크게 더 높지는 않았다. 본 글의 adjusted R2는 대체로 0.45-0.67을 기록한 반면, Jenson(2003)은 R2가 0.68-0.75이었다. 두 연구에서 사용한 추가변수들은 대다수 1인당 GDP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더욱 많은 변수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R2에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16) Aaronson (2011) 참고.

간주되고 있으며, WTO에서 서비스 시장개방을 다루는 GATS협정이나 서비스 시장개방을 다루는 각종 FTA에서는 법과 규제에 대한 투명성 및 비차별성과 분쟁해결에 대한 내용을 중요시 다루고 있다. WTO에서는 단순한 법과 규제의 공고를 요구하는 GATT협정의 X조의 일방적 투명성 개념으로부터 공고뿐만이 아니라 법이나 규제의 설정과정에 국내외 피규제자들이 코멘트를 하도록 규정하는 양방적 규제투명성의 개념을 TBT협정, SPS협정, 그리고 도하라운드에서 협상하고 있는 무역원활화 협정에 도입하고 있다¹⁷⁾. 또한 한미FTA와 한-EU FTA에서부터는 투명성에 대한 내용을 독립적인 장으로 협정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여기서는 FTA의 의무와 권리에 관련된 모든 법과 규제에 있어서 상대국 업체나 이해관계자들이 그들의 견해를 전달할 수 있는 양방적 규제투명성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본 글의 준비단계에서는 F5와 F6은 FDI와 긍정적인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관계가 보이지 않는 이유로는 F6은 규제집행에 대해서 부적절한 영향이 있는지 등의 문제를 다루지 외국인에 대한 차별대우가 있는가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FDI에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고, 투자자들의 FDI 결정은 규제의 투명성이나 집행보다 이득의 기회가 훨씬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일 수도 있다¹⁸⁾. 어찌하던 추가적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FDI의 영향을 검토한 본 글의 결과를 무역자유화의 영향을 검토한 Yang(2013)과 비교해 보면, 두 글 모두 경제적 세계화와 법치주의의 관계는 미미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Yang(2013)에서는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 상품과 서비스의 수입이 법치주의 지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 있으며, 그 주요 결과는 <표 7>에 나열하였다. 장기적 분석은 2012년 법치주의 지수를 존속변수, 1992-2001년의 무역통계(GDP 비중)의 평균을 독립변수로 사용한 분석이며, 중기적 분석은 2012년 법치주의 지수를 존속변수, 2002-2011년 무역통계(GDP 비중)의 평균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앞 제III장의 내용과 <표 7>의 내용을 종합하면, FDI와 수출 및 수입은 질서와 안전(F3)에 영향을 주고 FDI와 서비스 무역 및 수출은 부정부패의 부재(F2)에 영향을 준다. 상품과 서비스 무역은 형사사법제도(F8)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타났지만, FDI는 영향을 준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민사사법제도(F7)는 장기적으로 수출과 수입, 서비스 무역의 영향을 받지만 중기적으로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 FDI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효과적인 규제집행(F6)은 장기적으로 서비스 무역의 영향을 받지만 여타 종류의 무역으로부터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 FDI의 영향도 받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기본 인권(F4)이나 정부의 개방도(투명성) (F5), 그리고 정부권한의 제한(F1)은 무역이나 FDI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

17) 양준석(2006) 참조

18) Asiedu and Lien (2011)에서 자연자원을 가진 국가들이 여타 국가들보다 다른 결과를 보인 점도 이러한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고 볼 수 있다.

<표 7> 무역이 법치주의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의 결과

			독립변수							
			상품무역		서비스 무역		수출 (상품과 서비스)		수입 (상품과 서비스)	
			장기적	중기적	장기적	중기적	장기적	중기적	장기적	중기적
종 속 변 수	F1	정부권한의 제한	-	-	-	-	-	-	-	-
	F2	부정부패의 부재	-	-	**	-	*	-	**	-
	F3	질서와 안전	-	-	-	-	***	***	***	***
	F4	기본적 인권	-	-	-	-	-	-	-	-
	F5	정부의 개방도	-	-	-	-	-	-	-	-
	F6	효과적인 규제집행	-	-	*	^^	-	-	-	-
	F7	시민정의 (민사제도)	-	-	**	-	*	-	*	-
	F8	형사사법제도	-	**	***	-	***	**	***	**

<범주> *: 90% 신뢰도, **: 95% 신뢰도, ***: 99% 신뢰도. ^^:부정적인 관계(95% 신뢰도).

<자료> Yang(2013) <Table IV-1> p.48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세계화를 통하여 여타 국가의 기본인권이나 정부 권력의 제한 및 정부의 투명성을 추진하는 전략에 대해서는 통계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이는 하나의 국가가 무역이나 투자를 통하여 다른 국가의 제도개선을 유도할 수가 없다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따라서 어떤 기업이나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서 무역과 투자를 통해서 그 국가의 제도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주장은 다소 조심스레 접근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기본 정치경제제도의 개선은 그 국가의 국민들에 달려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세계화가 법치주의에 간접적인 영향을 가질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높은 1인당 GDP는 제도의 개선에 긍정적이고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사항이다. 따라서 본 글의 결과를 볼 때 FDI나 무역이 법치주의 및 제도의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하여도 세계화가 1인당 GDP의 증가를 유도한다면 이는 법치주의를 강화시킬 수 있다.

V. 결론

본 글에서는 FDI의 유입이 법치주의에 영향을 주는지를 WJP의 법치주의 지수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무역과 투자 등 경제 세계화를 통하여 기본적 인권이나 정부의 권한 제한 등 민주적 개혁을 개도국에게 유도시키고자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본 글의 결과는 다소 실망적이다. FDI는 정부권한의 제한, 기본적 인권, 정부의 투명성, 효과적 규제 집행, 민사와 형사 제도 개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반면, FDI는 부

정부패를 줄이는 데에 다소 관계가 있고 질서와 안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법치주의 등 국내 기본제도 개혁에 있어서는 외국으로부터의 영향보다 국내 세력의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또한 일부 세계화 비판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FDI의 유입이 기본 법치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FDI와 법치주의의 제고는 서로 별거된 분야라고 결론을 짓는다.

단, 법치주의와 1인당 GDP는 상당히 강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결과가 일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무역과 FDI유입이 1인당 GDP를 높여준다면 경제적 세계화가 간접적으로 법치주의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는 있다. 또한, EU나 미국이 최근 맺은 FTA 중 일부에는 기본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 이러한 타계팅한 시장개방이 효과가 있는지는 향후 연구를 통해 조사 결과를 보아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양준석 (2006). WTO 협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규제투명성의 개념과 조치. 무역학회지 31(4)
- 양준석 (2012). 법치주의와 경제성장률의 관계. 한국부패학회보 17(4)
- Aaronson, Susan Ariel (2011) Human Rights. Jean-Pierre Chauffour and Jean-Christophe Maur eds.,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Policies Development: A Handbook* (World Bank, 2011) pp.443-466
- Amnesty International (2002). *Business and Human Rights: A Geography of Risk*, London: Amnesty International and Prince of Wales International Business Leaders Forum.
- Busse, Matthias (2003). Democracy and FDI. HWWA Discussion Paper 220
- Kalinova, Blancka, Angel Palerm, Stephen Thomsen (2010). OECD's FDI Restictiveness Index: 2010 Update. *OECD Working Papers on International Investment, No. 2010/3*, OECD Investment Division, 다운로드: www.oecd.org/daf/investment/workingpapers
- Laudicina, Paul A., Erik R. Peterson, Johan Gott (2011). Cautious Investors Feed a Tentative Recovery, AT Kearney 다운로드: <http://www.atkearney.com/documents/10192/fdaa84a5-a30a-4e4e-bc36-453375d6596f>
- Li, Quan, Resnick, Adam, 2003. Reversal of Fortunes: Democratic Institutions and FDI Inflows to Developing Countri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57, 175-211
- Mann, James (2008) *China Fantasy*, New York, Penguin Books
- North, Douglass C., Weingast, Barry R., 1989. Constitutions and Commitment: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Governing Public Choice in Seventeenth-Century England. *Journal of Economic History* 49(4), 803-832
- Williamson, John, (2004). A Short History of Washington Consensus (2004), Paper commissioned by Fundación CIDOB for a conference "From the Washington Consensus towards a new Global Governance," Barcelona, September 24-25, 2004. 다운로드: <http://www.iie.com/publications/papers/williamson0904-2.pdf>
- World Justice Project (WJP) (2012) The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2012-2013. 다운로드: WJP website: <http://worldjusticeproject.org/rule-of-law-index>
- Yang, Junsok (2013). The Effect of International Trade on Rule of Law. *Journal of East Asian Integration*, 17(1)

투고일자 : 2013. 03. 06

수정일자 : 2013. 06. 01

게재일자 : 2013. 06. 18

<부록> WJP 2012년 법치주의 보고서 검토대상 국가목록

	고소득	상위 중소득	하위 중소득	저소득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호주 홍콩 일본 한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몽골리아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남 아시아 지역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네팔
동유럽과 중앙 아시아 지역	크로아티아 체코공화국 에스토니아 헝가리 폴란드 슬로베니아	벨로루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카자크스탄 마케도니아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터키	알바니아 조지아 몰도비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중동과 북 아프리카 지역	UAE^	이란^ 요르단 레바논 튀니지	이집트 모로코	
중앙 및 남 아프리카 지역		보츠와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공화국 나이지리아 세네갈 잠비아	부르키나 화소 에티오피아^ 가나 케냐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시에라리온 탄자니아^ 우간다 짐바브웨^
서 유럽과 북미 지역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			
남미와 카리브해 지역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자메이카 멕시코 파나마^ 페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니카라과^	

<자료> WJP (2012)

<범주> ^: 해외 FDI (2002-2012) 자료가 없음.

국문초록

외국인 직접투자와 법치주의와의 관계

양준석(가톨릭대)

본 글에서는 FDI의 유입이 법치주의에 영향을 주는지를 WJP의 법치주의 지수를 통하여 살펴본다. 일부 세계화 지지자들은 무역과 국제투자가 법치주의(정부권한의 제한, 부정부패의 부재, 질서와 안전, 기본적 인권, 정부의 개방도, 효과적 규제집행, 효과적 민사 사법제도와 효과적 형사사법 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법치주의가 강화되면서 무역과 FDI가 다시 증가하는 긍정적 피드백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 세계화 비판자들은 무역과 FDI는 국내 국민들의 권리나 이득보다 외국 기업의 이득을 강조함으로써 법치주의를 약화시킨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본 글의 결과는 양쪽 주장에 부정적이다. OLS 회귀분석의 결과 FDI는 정부권한의 제한, 기본적 인권, 정부의 투명성, 효과적 규제집행, 민사와 형사 제도 개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반면, FDI는 부정부패를 줄이는 데에 다소 긍정적 효과가 있고 질서와 안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법치주의 등 국내 기본제도 개혁에 있어서는 외국으로부터의 영향보다 국내 세력의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또한 일부 세계화 비판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FDI의 유입이 기본 법치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FDI와 법치주의의 제고는 서로 별거된 분야라고 결론을 짓는다.

단, 법치주의와 1인당 GDP는 상당히 강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결과가 일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무역과 FDI유입이 1인당 GDP를 높여준다면 경제적 세계화가 간접적으로 법치주의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는 있다. 또한, EU나 미국이 최근 맺은 FTA 중 일부에는 기본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타게팅한 시장개방이 효과가 있는지는 향후 연구를 통해 조사 효과를 보아야 할 것이다.

주제어: 외국인 직접투자(FDI), 법치주의, 경제개발